

南北韓 비교*

梁 性 喆
(慶 熙 大 學 校)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소득·소비면에서의 비교 |
| II. 본 론 | 3. 공급면에서의 비교 |
| 1. 사회 총생산의 비교 | III. 맺는 말 |

I. 머 리 말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분단된 뒤 줄곧 공허한 이념과 체제 우월성 논쟁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분단 40년이 지나고 올해 11월로 불세비키 혁명 70주년을 맞는 오늘, 이제는 공허한 이념과 체제 논쟁에서 벗어나, 그 동안 두 체제가 성취해 온 업적(performance)을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두 체제의 우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념, 정치체제, 경제정책 및 운용방식, 사회제도 그리고 문화양식이 서로 다른 두체제를 단순하고 단일한 지표(indicator)를 통해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다. 남북한의 비교·분석에 있어

* 이 논문 준비자료정리과정에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생 최병희군이 참여했음을 밝힘. 특히 지니 불평등곡선을 북한에 적용한 것은 최군의 아이디어임.

서 실제로 많은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problem)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도 커다란 제약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제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극히 잠정적이고 편린적이거나, 여기서는 남북한의 주민생활 비교를 다음 세가지 지표를 통해 시도해보았다.

- 첫째, 사회 총생산 규모,
- 둘째, 소득과 소비 수준,
- 셋째,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의 공급.

II. 본 론

1. 사회 총생산의 비교

사회 총생산을 측정하는 GNP등 지표가 어느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한 보기를 들면, 1985년 현재, 남한은 800억 \$ 규모로써 북한의 190억 \$에 비해 4.3배,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P)은 남한이 1998 \$로써 북한의 960 \$에 비해 2.1배가 된다.

남북한은 모두 분단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높은 성장율을 과시했다. 북한은 제 1차 7개년 계획 기간(1961~'70, 3년 연장 포함) 동안에 7.7%, 6개년 계획 기간(1971~'76) 동안에 8.2% 그리고, 제 2차 7개년 계획 기간(1978~'84) 동안에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율을 이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공업성장율을 달성하였다.

한국도, 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동안에 7.8%,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1967~'71) 동안에 9.6%, 제 3차 5개년 계획 기간(1972~'76) 동안에 9.7%, 제 4차 5개년 계획 기간(1977~'81) 동안에 5.8% 그리고 제 5차 5개년 계획 기간(1982~'86) 동안에 7.5%의 경제성장율을 보였고, 동 기간에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공업 성장율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한간 GNP 차이는

〈표 1〉 南北韓 GNP 및 Per Capita GNP의 변화추세

연 도	1960	'65	'70	'75	'80	'81	'82	'83	'84
GNP (남/북)	2.87	2.48	3.80	2.97	3.70	3.86	4.08	4.45	5.52
Per Capita GNP(남/북)	1.20	1.03	1.30	1.27	1.67	1.76	1.87	2.06	2.62

출처 : US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 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1986), p.23에서 재인용

3배 이상을 넘지 아니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 침체로 인해 그 성장율이 저조해져 두 체제간의 GNP 격차는 증가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산업간의 생산능력 차이를 보면, 철강생산에서 남한은 북한의 3.2배, 화학비료 생산에서 1.7배, 전력생산에서 2.3배로 앞서고 있으나, 석탄생산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1.6배 높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가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중공업과 방위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대거 투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으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성장한계(Bottle-neck) 현상에 직면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기간(1978~'84)에 소기의 목표달성에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87년 올해 제 3차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는 바 그 목표는 이전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북한은 한편, 장기적인 국내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4년 대외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합영법(Joint Venture Law)을 채택하였다. 이는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그 동안, 비공산권과의 무역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던 것이다. 실제, 1971년 대공산권과의 무역량은 85%에서 1980년 54%로 줄은 반면, 자유진영과의 무역량은 같은 기간동안에 15%에서 46%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

고 있으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커다란 전환이 없이는 뚜렷한 결실이 나타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중공의 등소평 체제하의 경제개혁이나 소련의 고르바체프하의 새로운 개방정책(glasnost) 같은 대폭의 개혁을 북한에서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한 대폭의 개혁이나 정책전환은 기존 김일성지도 체제 자체에의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아뭏든 구체적으로 가장 격차가 심한 1960~1984년까지의 남북한 무역규모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南北韓 무역량 비교추이(1960~'84)

연	도	1960	1970	1975	1980	1984
무역규모(남/북)		1.1	4.1	6.7	11.9	24.3
수출규모(남/북)		0.2	2.8	6.6	10.7	24.6
수입규모(남/북)		1.9	5.2	6.8	13.0	24.1

출처 : Economic Planning Board, South Korea, *Major Statistics of Economy*, 1960~1984 ; 1975년까지는 The Rand Corporation과 USCIA자료이용 ; 80년과 84년 수치는 IMF와 UN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al Yearbook* 참조. 그리고 일본무역진흥회,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전망」(1986), 5 참조.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1986), p. 34.에서 재인용.

이같은 무역규모의 차이는 남북한의 GNP 격차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1985년 현재, 한국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73.8%인데 반해, 북한의 GNP 대비 무역의 비율은 겨우 18.5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산업이 침체해 있는 북한의 경우, 대외 경제협력의 불가피한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등 첨단 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수출 증대가 크게 기대되어 남북한간의 GNP 규모 차는 더 크게 벌어지리라 예상된다. KDI의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구상(1985, p. 207)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GNP와 무역의 규모차이는 〈표 3〉, 〈표 4〉와 같다.

농업생산 부문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곡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은 84년 현재 665만톤을, 북한은 같은 해 560

〈표 3〉 南北韓의 GNP 전망(1985~2000)

연	도	1985	1990	1995	2000
G N P (10억 \$)	南 韓	81.5	112.2	166.5	247.5
	北 韓	16.7	20.8	26.4	34.3
비 율	南 / 北	4.88	5.39	6.31	7.22

출처 : 국토통일원, 「南北韓 主要指標別 변화추세」(1984), KDI

〈표 4〉 南北韓의 무역 전망(1985~2000)

연	도	1985	1990	1995	2000
수 출 (억 \$)	南 韓	280	422	632	925
	北 韓	21	30	42	60
수 입 (억 \$)	南 韓	285	409	603	892
	北 韓	24	33	46	66

출처 : 上同

〈표 5〉 南北韓 곡물생산 추이(정곡기준, 만ton)

연	도	'69~'71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北 韓	韓	298	300	390	424	452	438	476	371	510	546	520	560
南 韓	韓	586	600	656	726	701	730	728	462	614	615	645	665

※ 감자와 콩은 제외

출처 : 국토통일원, 「北韓의 經濟實態」(1986), p. 103.

United Nations, 1981 *Statistical Yearbook* (New York, 1983), p. 495.

〈표 6〉 南北韓 쌀생산 추이(정곡기준, 만 ton)

연	도	'69~'71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북	한	96	140	148	166	184	182	176	125	196	202	212	221
남	한	396	444	467	521	600	580	557	355	506	518	540	568

출처 : 국토통일원, 「北韓의 經濟實態」(1986), p. 103.

농수산부, 「농업주요지표」(1985), pp. 182~18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South Korea: Country Profile 1986~1987*, p. 22 참조.

만톤을 각각 생산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은 쌀을 568만톤, 북한은 221만톤을 생산했다. 생산 총량면에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다소 앞서

있으나, 인구 규모비 2.1배를 고려한다면, 일인당 곡물 생산량은 북한이 앞서고, 쌀 생산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1984년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율이 49%(쌀 자급율, 97.8%)이나, 북한의 식량 자급율이 87.9%~96.6%(쌀 자급율, 110.2%~121.2%)인 것은 주목된다.

농업은 한국에 못지 않게 북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 현재, GNP 대비 농업의 비율이 북한의 경우 24%이나 한국의 경우, 15.8%이며, 상품수출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의 경우 31%이나, 한국에서는 3%로 아주 낮다. 그 만큼 농업은 북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쌀을 수출주종목으로 삼고 다른 곡물을 대신 수입하므로써 외화획득을 추구하는 구상 무역(救償貿易)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것은 북한이 그 동안 중화학 공업과 방위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제품의 생산을 도외시해 온 데 크게 기인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분단 초기부터 경공업 중심의 수출상품 육성에 크게 투자하여 경공업 산업이 크게 앞서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 북한의 24배, TV 수상기 생산에서 46배, 전화 가입자 수에서 22배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소비재 공급부족은 북한주민들의 물품 구득난을 심화시키고, 가격 앙등을 초래하여, 결국, 열악한 생활수준을 가져오게 한다.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차이는 소비생활 측면에서도 더욱 실감있게 나타난다.

2. 소득·소비면에서의 비교

소득과 소비면에서 남북한 비교는 남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수준과 직결되므로 주민의 생활을 비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84년 이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을 높여, 최근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예산 가운데 인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의 20%정도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교육과 보건 부문의 예산량이 84년 이후 107~108%정도 증가하였고,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임금도 1.6배와 1.4배로 각각 증가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의 20%정도로 간주되며, 6차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1987~'92)기간 동안에는 GNP의 3%로 증가될 예정이다.

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행정·관리직종에서는 남북한간의 임금차가 3.8배(U.S\$ 기준), 사무직종에서는 7.1배, 판매직종에서는 5.1배 그리고 생산직종에서는 3.6배로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훨씬 많은 액수를 받는다. 북한에서 고급 관리는 모두 임금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무직종의 임금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생산직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감안하여, 타직종에 비해 생산노동자의 임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학력 위주의 사무직 노동자가 저학력 중심의 생산 노동자보다 높게 보수를 받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치 기준이 이데올로기보다 업무의 기능과 업적에 따른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면에서 볼 때, 남북한간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가처분 소득율은 GNP의 70% 이상으로서 국민 소비성향 75%(민간 소비율 65% 정도) 정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민의 가처분 소득율은 GNP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부가 예산으로서 GNP의 75% 정도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가운데 10%정도만 이전 소득(Transferable Income)으로서 국민에게 전환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국민소비 성향은 63%정도로서, 정부가 GNP의 30% 정도를 국민의 소비부문에 투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 개개인이 평균적으로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의 70% 정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는 반면, 북한의 경우 일반 주민은 32%정도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만큼 북한의 주민은 개인의 선택과 소비에서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소득에 기반을 두고, 남북한 주민의 가구별 소득분포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건전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0분위별 소득분포에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82년 현재, 0.3574이고, 하층 4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18.8%이고, 반면에 상층 2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42.99%로서 그 차이가 큰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5분위 소득에서 지니계수는 1983년 현재, 0.2106이고, 하층 40%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33.4%이고 반면에 상층의 주민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전체의 20%로서 소득분포는 아주 양호하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소득분포에서 소득집중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아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 재벌의 사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부의 집중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 있어서 소득분포 상황은 농가보다 비농가에서 불건전하며, 그 가운데 특히 고용주의 소득분포는 더욱 불건전하다. 한국의 고용주의 경우 지니계수는 0.4460이다. 또한 자산분포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의 58.38%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상위 10%는 39.47%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의한 소득분포의 상황이 북한에 비해 특징적으로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분포 상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양호한 편에 속한다.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지니계수는 0.3500~0.3700 정도이며, 세계에서 소득 집중이 가장 불건전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0.6200이다. (세계 42개국의 지니계수를 조사하고, 생활수준을 측정할 박 한식 교수의 'Human Rights and Modernization: A Dialectical Relationship'에 따르면, 한국은 지니계수에서 세계 3위로 양호하다. 그리고 생활수준은 동독의 14위, 유고슬라

비아의 20위보다 약간 뒤진 22위다.)[한국과 북한 지니계수분석은 부록 1과 2 참조]

소득분포의 균형이 곧 절대적인 차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실제, 85% 이상의 주민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76%의 주민이 평균 가처분 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경우, 평등하다 해도 그것은 가난속의 평등(Equality in absolute poverty)이며, 반면, 남한의 경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불평등(Relative inequality in abundance)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공급면에서의 비교

북한의 경우, 전반적인 주민생활의 궁핍은 주로 산업의 생산능력 저조로 인한 공급부족에 있다. 북한에서 의식주에 관한 일상 소비품은 그 물량이 크게 부족해서 일반 주민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무원 계층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은 140원 수준인데, 신사복 한벌 구입하는데(108원) 3개월 이상 저축해야 되고, 냉장고는 4개월, TV는 9개월 그리고 라디오는 2개월 이상 저축해야 한다. 특히, 고급 소비재일수록 그 물량이 적어서 값은 엄청나게 비싸며 이런 제품은 주로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전거는 1,000원, 일제 세이코 시계는 1,500원, 선글라스는 100원, 그리고 소형 녹음기는 1,000~1,500원 정도다.

고급 소비재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식량이 모자라서 봉급의 대부분을 식량구입에 할애한다고 최근 일본을 거쳐 월남한 김만철씨는 말한다. 실제, 김만철씨의 경우, 월 가계소득은 160원인데, 그 가운데 150원 정도가 식량 구입에 쓰인다(쌀 6kg이 암시장에서 120원, 정부공급품(쌀, 기본 의류 및 부식 등)의 구입 가격이 30원 정도). 정부가 공급하는 물품, 예를 들면, 쌀, 잡곡, 작업복, 내의 및 부식등은 기본 생활 필수품으로서 아주 싼 가격으로 주민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그 공급량이 부족하고, 고급 품목일 경우는 더욱 부족해서, 암시장에서는 본래 가격의 20~30배를 주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공급쌀 가격은 kg당 62전이나, 암시장에서는 20원이다.

북한의 경우는 식량 뿐만 아니라, 주택, 의류등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얼핏 길으로 보면 폭넓고 심도있게 발달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실제로, 북한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적 계급성 때문에 일반 주민은 고급 관리에 비해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즉, 신분(당이나 정부의 기관에서 차지하는 지위)은 그 사람의 권력, 명예, 임금, 사회적 서비스 및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은 고급 주택과 기본 의류 및 고급 의류를 무료로 무한히 공급받는다. 그리고, 4급 이상의 계층(지방의 부기관장급: 부도인민위원장, 시인민위원장)은 중앙공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본 생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서, 자신의 가계소득으로는 기타 고급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주민은 일반공급대상으로서(국민의 약 85%) 정부가 짠 값으로 제공하는 주택, 기본 의류 및 식량등의 비용을 지불하고(가계소득의 25%정도), 기타의 소득으로 다른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하층 주민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한국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주택 보급율은 1984년 현재, 전국적으로 70%정도, 도시에서는 58%정도다. 북한의 주택 보급율은 같은 해, 전국적으로 65%정도이며, 도시에서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구당 사용 방 수는 2.1개이고, 도시에서는 방 1개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만도 42%가 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전국적으로 68.5%의 가구가 방 1~2개로 생활하며, 1방당 인구 수는 3.1명으로 한국의 2.2명에 비해 높

은 편이다.

북한의 주요 주택관계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북한의 주요 주택관계 지표

계	총	세대수 (천개)	인구수 (천명)	주택공간 (평)	방 수	주택보급율 (%)
당·정 간 부		190	950	20	3	100
지방기관장급		380	1,900	15	2~3	100
기업소 간 부		620	3,100	10	2	68
노동자·농민		2,590	12,950	8	1~2	75
계		37,780	18,900	—	—	65

출처 :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 수준비교」 (1984), pp. 188~192.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질적인 면에서 양 체제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의 하나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1990년대에 아파트비율이 전체 주택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는 아파트가 주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복의 공급물량도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찍부터 섬·의류 수출산업이 발달하여 의류의 양적인 공급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고급의류를 찾는 질적인 문제가 주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양적인 공급 부족이 존재한다. 실제로, 북한 주민은 가계지출 가운데, 의복 구입비로 23.2%를 할당하고 있어 한국의 8.1%에 비해 훨씬 높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의 경우 국민의 의복 지출율은 가계 지출의 10%를 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 가계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하여 1년에 옷 한 벌정도 구입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면, 외식을 하거나, 추첨제 저축을 한다고 한다. (「북한기행」참조).

이처럼, 북한에서는 의류의 구입조차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김일성은 1984년 11차 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그리고 올해 제3차 7개년 계획의 발표를 통해 북한 주민 생활의 향상, 특히, 그 가운데, 의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당과 국가가 당면한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하나라고 시인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Ⅲ. 맺는 말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특히, 일반주민의 소비생활면에서 북한주민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제한받고 있어서 욕구충족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북한은 소득분포의 안정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으나, 절대적 수준에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계급적 차별대우로 인해 당·정·군간부 이외의 하층 주민의 삶은 크게 낮은 상태다. 특히, 북한 사회는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 사회조직 및 문화·예술 활동이 모두 규제받고, 제한받고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가치와 질은 크게 떨어진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정치적으로 참여가 크게 제한받는 제한적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나 권위주의 정치체제이지만, 기타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 활동은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보다는 훨씬 제한받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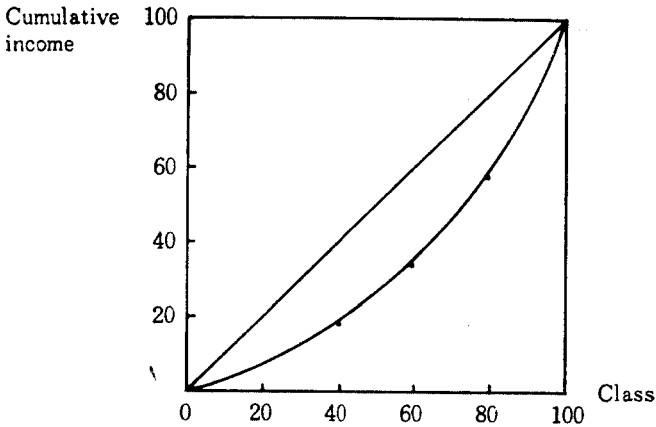
요컨대, 평등이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 인간의 다른 많은 가치, 특히,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바로 자유의 부재라는 너무나 큰 cost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자유, 즉,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은 삭막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1. 1982 SIZE DISTRIBUTION OF INCOME (%)

Decile	All household	Agricultural household	Employee household	Employer household
First	2.56	2.75	3.22	1.75
Second	4.30	4.82	4.97	3.25
Third	5.46	6.06	6.03	4.22
Fourth	6.48	7.18	6.94	5.40
Fifth	7.51	8.24	7.93	6.50
Sixth	8.73	9.40	9.04	7.89
Seventh	10.03	10.78	10.37	9.31
Eighth	11.94	12.47	12.12	11.63
Ninth	14.94	15.02	14.96	15.17
Tenth	28.05	23.28	24.42	34.88
Gini coefficient	0.3574	0.3061	0.3090	0.4446
Decile distribution ratio	18.08	20.81	21.16	14.62
	-42.99	-38.30	-39.38	-50.05

29) Choo Hakjung, "Estimation of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ts Sources of Change in Korea, 1982,"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XII(1985), p. 94.

Figure 1. Lorenz Curve, Cumulative Proportion of Total Income



부록 2.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BY CLASS, 1983

Class	Number of household ('000)	Household income (won)	Sum of income (million won)	Ratio of population (%)	Ratio of income (%)
Party-government cadres	190	330	6.270	5.0	9.3
Head of provincial office	380	240	9.120	10.0	13.5
Company cadre	620	211	13.082	16.4	19.3
Worker(city)	890	154	13.706	23.5	20.3
Peasants	1,700	150	25.500	45.0	37.6
Total	3,780		67.740	100.0	100.0

30) This figure is basically based on Kim Yonggyu's book, *Bukhan Juminui Silgil Sobisaenghwal Bigyo (North-South Real Consumption Comparison)* (1984.12), p.191. But the total income of the people (67.740) is here less than his calculation, 76.880 million won.

Figure 2. Lorenz Curve, Cumulative Proportion of Total Income

